■ 민족문화연구 제93호(2021.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73-294.
http://doi.org/10.17948/kcs.2021..93.273

일제 조선통치자의 한일회담에 대한 상상력*
: 이승만 정권 말기, 장면 내각, 박정희 정권 초기

박경민(朴敬珉)**

목 차

1. 들어가며
2.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4.19혁명까지: 기시 내각 비판
3. 장면 내각 수립부터 5.16쿠데타까지: 一步전진 二步후퇴?
4.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한일협정 체결: 뒤섞인 기대와 우려
5. 나오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조선통치자가 해방 후 한일 양국관계의 근간인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어떻게 인식했었는지를 복원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한일관계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낸다. 아울러 이승만-기시 정권기 한일관계부터 주목해보면 과연 그들에게 한일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들은 일본정부와 협력해서 한반도 소재 재산 규모를 조사한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대한청구권 주장, 그리고 구보타망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841). 귀중한 심사의견을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까지 지탱하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한일회담에 확실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3년의 교섭 결렬부터 4년 반 만에 회담을 재개하고자 기시 정권은 한국측이 요구한 대한청구권과 구보타망언의 철회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일회담에서 조선통치자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점차 외교교섭에서도 배제되며 한일회담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선통치자들이 보인 일본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일회담 시기 양국관계에 대한 그들의 전망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선통치자들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주목한 '미국 책임론'을 실제 교섭의 진척 상황과 대비시켜서 그들의 한일회담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통치자들이 시종일관 한일관계에서 중요시했던 부분이 역설적으로 '국민감정'이었다는 점 또한 밝혀보도록 한다.

주제어: 조선통치자, 한일회담, 청구권, 미국비판, 국민감정.

1. 들어가며

일제강점기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인 통치자들[1]은 패전 이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이하 한일회담)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들은 이승만 정권 후반기에도 정체되는 한일회담에 대해 '십 년 회담',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권기에는 '병합 삼십수 년, 전후 이십수 년, 무조약 상태 십수 년'이라는 수식어로 한일관계를 표현했다.[2] 한일회담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국교수립을 위해 소

1) 이 논문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했던 재조일본인들 가운데 1945년 패전 이후 조선총독부 고위관료 출신자에게 주목한다. 그중에서도 중앙일한협회(中央日韓協會) 회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전 정무총감), 부회장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 전 식산국장), 전무이사 하라다 다이로쿠(原田大六, 전 관방기획과장)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전전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를 비롯해 정재계에 정보망을 지니는 핵심인물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시점까지 실질적인 교섭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초기 한일회담 시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섭 내막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처럼 재조일본인들 중에서도 한일회담과 관련된 고급 정보의 지근거리에 있었을 법한 총독부 고위관료 출신자들이 결국 그 교섭과정에서 소외된 채 한일회담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그들을 '조선통치자'라는 용어로 축약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72호 1962.4.1, 1면부터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24호 1966.8.30, 1

요했던 '14년의 세월'을 강조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그들은 해방 후 한일관계를 인식하는 출발점을 한국의 일제병합에 두고 패전을 거쳐 국교수립에 이르는 기간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처럼 독특한 존재인 그들의 관점에 주목해서 한일회담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들이 오늘날 한일관계의 근간인 한일회담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복원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4] 이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한일관계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낸다. 아울러 이승만-기시 정권기 한일관계부터 주목해보면 과연 그들에게 한일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들은 일본정부와 협력해서 한반도 소재 재산 규모를 조사한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일본정부의 대한(對韓)청구권 주장, 그리고 구보타(久保田)망언까지 지탱하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었다.[5]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한일회담에 확실히 작용하고 있었다. 그

면(友邦文庫 청구기호: A ト 12, 이하 동일)까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3) 최근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문서 공개 성과를 반영한 연구가 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최신 연구성과를 포함해 공식, 비공식 행위자들의 한일회담 교섭사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통치자에게 착안점을 두고 한일회담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특징이다. 金恩貞,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政治史』, 千倉書房, 2018;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공간, 2016; 장박진, 『미완의 청산: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 역사공간, 2014. 李鍾元, 木宮正史, 浅野豊美編著,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에 수록된 安昭榮, 「韓日会談をめぐる日本の政策決定過程: 一九六〇年の局面転換期を中心に」와 池田慎太郎, 「自民党の「親韓派」と「親台派」: 岸信介・石井光次郎・船田中を中心に」를 참조 바람.

4) 참고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조선통치자의 한일회담 인식은 재조일본인 출신자들 모두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인식의 유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다만, 재조일본인 출신자들의 식민통치에 대한 자기변호와 자기비판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들은 내선융화(內鮮融和)를 지향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질한 인식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식민통치를 부정당하는 언사나 처사를 보면 서슴없이 분노하고 행동했다. 그 대표 사례가 그들의 한반도 소재 재산 규모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일본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일본 측 대한(對韓)청구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한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재조일본인을 대표하는 조선총독부 고위관료 출신자의 한일회담 인식을 통해 1950년대 후반부터 그들의 한일관계에서의 영향력 감소와 한계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5) 자세한 내용은 朴敬珉, 『朝鮮引揚げと日韓国交正常化交渉への道』,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8을 참조 바람.

러나 1953년의 한일교섭 결렬부터 4년 반 만에 회담을 재개하고자 기시 정권은 한국 측이 요구한 대한청구권과 구보타망언의 철회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일회담에서 조선통치자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저하되었고, 점차 외교교섭에서도 배제되며 한일회담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선통치자들이 보인 일본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일회담 시기 양국관계에 대한 그들의 전망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선통치자들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주목한 '미국 책임론'을 실제 한일교섭의 진척 상황과 대비시켜서 그들의 한일회담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통치자들이 시종일관 한일관계에서 중요시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혀본다.[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한일회담의 중단과 재개의 추이에 따라 드러내는 그들의 식민지지배 인식과 대응이 한일회담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7] 즉 그들의 인식이 한일회담에 임하는 일본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기시 내각에서 진행된 제4차 한일회담부터는 일본정부가 대한청구권과 구보타망언을 철회함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한일협정 체결 때까지 이어진 것이 실상에 더 가깝다.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시 정부의 대한정책을 둘러싼 조선통치자의 저항과 비판의 양상에

6) 분석의 근거 자료로 중앙일한협회(中央日韓協會)가 발간한 기관지『同和』를 활용한다. 중앙일한협회는 조선총독부 고위관료 출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인 귀환자들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설립된 동화협회(同和協會)의 후신이다. 1952년 제1차 한일회담 결렬 이후 한일관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단체명을 개칭했다. 운영 임원진은 총독부 고위관료 역임자를 비롯해 조선 관련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회원수는 동화협회 창립 당시 1,000명을 넘어서는 규모였다. 지방 부회는 본토(本土)에서 규수(九州)에 이르는 여러 현에 걸쳐서 설치, 운영되었다. 기관지『同和』는 1948년 8월 제1호부터 1968년 2월 제241호까지 발간되었다. 이 기관지는 초반에 회원들의 전후(戰後) 동향을 중심으로 전하는 소식지에서 점차 재외재산 보상문제와 한일관계 현안의 추이에 비중을 두는 종합지로 성격이 바뀌었다. 자세한 사항은 박경민,「일본인 귀환자 단체 同和協會, 中央日韓協會의 한반도 인식: 기관지『同和』를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22-1, 2021.2, 30-35면을 참조 바람.

7) 이형식,「조선통치관계자와 한일교섭」,『일본연구』80,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9; 朴敬珉, 앞의 책, 2018; 노기영,「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한일민족문제연구』10,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정병욱,「조선총독부 관료의 일본 귀환 후 활동과 한일교섭: 1950, 60년대 동화협회(同和協會)·중앙일한협회(中央日韓協會)를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14, 역사문제연구소, 2005.

주목한다. 그리고 장면 내각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을 거치며 상당히 진전된 청구권 문제의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들의 한일회담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도록 한다.[8]

2. 이승만 정권 말기부터 4.19혁명까지: 기시 내각 비판

해방공간에서 38도선 이북 지역 소련군 진주하에 머물던 일본인들 중에는 현지에 억류되거나 시베리아, 사할린 등으로 강제이송 당한 이들이 있었다. 1948년 북한에서 일본행 정식 귀환선이 떠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억류 중인 일본인들의 귀국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 가족들 단체(待ちわびる心の會)와 중앙일한협회(中央日韓協會)는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다가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 중국, 소련 공산권의 평화공세를 배경으로 스위스 적십자사연맹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일본인 문제를 둘러싼 북일 적십자사 간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섭과정에서 일본 측이 의뢰했던 일본인 억류자 생존 여부 결과가 극소수를 제외한 전원사망으로 드러나자 국제정세의 긴장 완화를 배경으로 진전된 북일관계는 좌초되었다.[9]

한편, 한일관계는 1951년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청구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일본 측 구보타 대표의 식민통치 옹호 발언으로 인해 회담 중단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1957년 기시(岸) 정권이 들어서자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기시 수상은 한국 측이 교섭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운 구보타 발언과 일본의 대한(對韓)청구권 철회를 받아들이고 문화재 일부도 반환했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을 사이에 두고 발생한 일본인 어부 부산억류자와 오무라(大村)수용소에 갇힌 재일조선인의 상호석방 교섭도 진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반공과 안보를 축으로 미일관계를 재조정

8) 1951년 10월 예비회담의 전후부터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이 구보타망언으로 결렬될 때까지 일본정부는 한반도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조선통치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교섭과정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했었다. 그러나 1957년 기시 내각 이후부터는 한일회담을 둘러싼 일본정부와 조선통치자들 사이의 접촉과 정보 공유는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민, 앞의 글, 2021, 41-43면.
9) 같은 글, 44-47면.

하여 일본의 아시아외교 지평을 넓히려는 기시 수상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다.[10] 그렇기에 그는 그 전략적 출발점을 한일회담 재개에 두고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한일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대한청구권 철회는 그 문제의 당사자인 조선통치자들의 비판을 초래했다. 그들은 패전 이후 미군정청(USAMGIK)에 의해 몰수된 한반도 소재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가의 법률상 보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되, 외지 거주자들의 사유재산 피해의 '특이성'을 감안해서 여러 번에 걸쳐 급부금 등을 지급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기시 정권하에서 1957년 3월 각의결정을 거쳐 '인양자 급부금 등 지급법'(1957.5.17)에 의거해서 지급된 국채이다.[11] 이 조치에 조선통치자들은 불만족스러움을 표하면서도 오랜 숙원의 일부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에 안도했다.

그러나 기시 내각에서 대한청구권을 포기하고 한일회담을 재개하려는 소문이 무성해지자 조선통치자들은 본인들의 몰수된 재외사유재산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들은 "대단히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라고 질책하며 가칭 '재선사유재산권확보동지회'(在鮮私有財産権確保同志会)와 같은 형태로 또 다른 보상요구 운동에 돌입했다.[12] 이러한 비판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1957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조선통치자들은 일본 측의 대한청구권과 함께 구보타 발언 철회가 의미하는 바를 지적했다. 구보타 발언의 철회는 일본제국의 찬란한 식민통치 유산을 모독하는 것이며, 대한청구권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분해도 되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13]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본정부가 대한청구권을 철회한 이상 번복할 수 없으

10) 原彬久編著, 『岸信介証言録』, 毎日新聞社, 2003, 131-134면.
11) 内閣総理大臣官房管理室, 『在外財産問題の処理記録: 引揚者特別交付金の支給』, 1973, 서문, 14-15면.
12)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13호 1957.5.1, 1-3면.
13)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22호 1958.2.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23호 1958.3.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24호 1958.4.1, 1면.

니 한일 양국 사이에 국교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해결을 위한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다만, 1958년 4월 15일 한일회담 정식 재개를 앞두고 향후 주요 의제들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기를 당부했다.[14] 제4차 한일회담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면 여타 의제는 순조롭게 타결되리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오무라 수용소로 국한되었던 재일조선인의 북한행이 조총련과 일조협회를 비롯한 혁신세력의 운동에 힘입어 전국적인 북한 귀국사업으로 확대되자 한일회담 논쟁의 주무대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위원회'로 옮아갔고 교섭은 난관에 봉착했다.[15]

기시 수상은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자 1958년 5월 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를 개인특사로 한국에 파견했다. 야쓰기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기시 수상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한국에 대하여 범하였던 과오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그가 "지난날에 저질은 과오를 씻기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친서를 전달했다.[16] 이를 두고 일본 국내에서 '사죄외교'라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특히 조선통치자들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전 정무총감) 중앙일한협회 회장은 야쓰기의 발언에 대해 "奇怪至極遺憾千萬"이라는 수식어로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다나카 회장은 주변에서 야쓰기 방한에 대한 책임추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자 기시 총리, 후지야마(藤山) 외무대신 앞으로 항의 서한까지 보냈다.[17] 참고로 야쓰기는 이러한 조선통치자들을 한일 친선을 가로막는 패전 이후의 "일종의 정한론자"로 치부했다.[18]

이처럼 일본 국내에서 한일회담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앞서 언급한 북한 귀국사업과 한일회담 추진 중에서 결국 북일관계를 택했다. 1958년 8월부터 '지상낙원'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이어서 이듬달 김

14)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25호 1958.5.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26호 1958.6.1, 1면.
15) 박정진, 「북일냉전, 1950~1973: 전후처리의 분단구조」, 『일본비평』 22, 서울대 일본연구소, 2020, 121-122면.
16) 『조선일보』 1958.5.22, 1면; 金東祚, 『冷戰시대의 우리 外交』, 문화일보, 2000, 105-108면.
17)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27호 1958.7.1, 1면.
18) 矢次一夫, 『わが浪人外交を語る』, 東洋経済新報社, 1973, 50-51면.

일성 수상이 재일조선인 귀국 환영 의사를 표명, 기시 내각은 후지야먀 외상의 발언을 거쳐 각의 양해 방식을 채택, 이후 캘커타 협정(1959.8.13)에 따라 1959년 12월부터 북송사업이 시작되었다.[19]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정부의 각의 양해 이후 "인도주의의 반역", "일본의 흉계 분쇄"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북송 저지를 위해 초당적 입장에서 각계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재일한인북송반대전국위원회'(1959.2.16)가 발족되었다.[20] 한편 일본 사회는 민단의 반대 운동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북송사업이 갖는 '인도주의'라는 명분에 이견이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선통치자들은 침묵을 유지하다가 일본정부의 각의 양해 이후에 발언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인도적 차원이라는 형식적인 틀로 처리해버려도 되는지, 그리고 한일회담 중에 이러한 선택이 적절한 것인지, 한국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진정한 행복을 억누르면서까지 북한 귀국을 저지하는 것이 과연 정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시했다.[21] 그리고 한국정부가 일본 측 북송사업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한일 교섭을 일절 거부한다거나 북한의 북송사업에 대한 접근방식과 교섭과정을 봐도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일본정부가 한국 측과 솔직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22] 조선통치자들은 북송사업의 협정이 체결되자 한국이 일본의 용공(容共)정책을 맹렬하게 비난하면서도 한일회담 재개로 북일관계를 정면돌파하려는 것을 평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승만의 대일방침 변경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한국의 대선을 앞둔 만큼 선거결과에 따른 정책변화에 주목했다.[23]

3. 장면 내각 수립부터 5.16쿠데타까지: 一步전진 二步후퇴?

19) 菊池嘉晃, 『北朝鮮帰国事業の研究: 冷戦下の「移民的帰還」と日朝・日韓関係』, 明石書店, 2020, 315-316면; 박정진, 앞의 글, 122, 133면.
20) 『조선일보』 1959.2.17, 1면; 『경향신문』 1959.2.17, 1면.
21)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35호 1959.3.1, 1면.
22)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37호 1959.5.1, 1면.
23)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41호 1959.9.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46호 1960.2.1, 1-2면.

1960년에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전 선거구호인 "못살겠다 갈아보자"에서 "협잡선거 물리치자"로 변경했다.[24] 조선통치자들로서도 이에 공감하며 이승만 정권하에서 진행되는 한일회담에 회의적이었다.[25] 대선 결과가 제4차 이승만 정권의 등장으로 나타나자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정부의 상호불신 해소와 신뢰를 축적해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26] 그러나 민주당의 우려대로 3.15대선이 부정선거로 점철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마산에서 발발한 규탄 시위에서 비롯되어 대통령의 하야 성명과 함께 이승만 정권은 종식되었다. 예상 밖의 소식을 접한 조선통치자들은 큰 전환점으로 인식하며, 한국 야당이 내걸었던 한일관계의 정상화 공약이 실현되어 회담 재개는 물론 경제와 문화의 교류도 촉진되기를 기대했다.[27]

허정 과도정부는 첫 국내외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가 북송사업을 즉각 중단한다면 언제든 한일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으며 교섭 진전의 일환으로 기시 총리 내지는 고위책임자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산에 억류된 일본인 어부 중에 형기를 마친 이들을 석방·송환, 그리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인 기자단 14명의 정식 입국까지 허가했다.[28] 한편 1960년 일본에서는 기시 내각의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대한 안보투쟁이 정점을 향해 가며 진보파와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었다. 안보조약 개정의 자연승인 후 기시 수상은 6월 23일 내각 총사직을 공표했다.[29] 이로써 한일회담을 이끌어갈 신정권의 등장이 예정되었다. 한국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완성되고 민주당이 7.29총선거에서 압승했다. 국무총리에 취임한 장면은 부통령 때부터 제시했던 대일외교 방침과 총선거 공약에도 내걸었던 '한일관계 정상

24) 서중석 지음,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07, 161, 224면.
25)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47호 1960.3.1, 1면.
26)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48호 1960.4.1, 1면.
27)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0호 1960.6.1, 1면.
28)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0호 1960.6.1, 1면.
29) 오구마 에이지 지음, 조성은 옮김, 『민주와 애국: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공공성』, 돌베개, 2019, 637-657면.

화'에 맞춰 회담 재개에 나섰다.[30]

한일 양국에서는 회담 재개를 넘어 협정 체결의 기대감까지 높아졌다. 조선통치자들은 일단 한일관계의 제약요인으로 북송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국 측의 양해를 구하는 세심한 외교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1] 그래야지만 북송사업과 한일회담이 상충하지 않도록 동시에 추진 가능하다는 조언이자, 어디까지나 한일관계에 중점을 두고 일본외교의 실리를 추구하라는 제언이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소득배증(所得倍增)계획'이라는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이케다(池田) 내각이 출범했다. 이케다 내각은 한일관계의 핵심사안인 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회담 재개를 모색했다. 이는 미국의 대한원조 감소 추세를 배경으로 장면 정권이 경제발전을 위해 대일관계 개선이 요구되는 이해관계와 일치했다.

이에 따라 1960년 9월 고사카(小坂) 외상이 일본정부의 첫 공식 친선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고사카 외상은 도착 성명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인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상호신뢰" 관계의 수립을 희망한다고 밝혔다.[32] 그는 정일형 외무장관,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를 차례로 만나며 한일 양국의 친선을 비롯해 경제협력을 통한 반공 노선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33] 고사카 외상의 방한에 대해 일찍이 성공을 기원했던 조선통치자들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기운을 감지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한국 국내여론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진지하게 한국인의 감정을 살펴서 북송, 평화선, 경제협력 등의 제 문제를 검토하고 이론과 현실을 조합하도록 역설했다.[34]

한일 양국은 1960년 10월 제5차 한일회담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청구권

30) 김용호·조영희, 『장면 정권의 내각제는 왜 실패했는가?』(연구보고서 09-03), 미래한국재단, 2010, 41-55면; 서중석, 앞의 책, 174-175면.
31)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2호 1960.8.1, 1면.
32) 外務省公開外交記録文書, 「一九六〇年九月六日小坂大臣ソウル到着の際の声明」, 文書番号772, 5-6면; 『조선일보』 1960.9.6, 1면.
33) 外務省公開外交記録文書, 「小坂大臣・鄭外務部長官会談録」, 「小坂大臣訪韓の際の尹大統領,張国務総理との会談中注目すべき諸点(局長の口述されたもの)」, 文書番号512, 1-32면; 『조선일보』 1960.9.6, 1면.
34)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3호 1960.9.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4호 1960.10.1, 1면.

문제 검토에 처음 돌입했다. 한국 측이 지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제시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협정 요강'(대일요강 8항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항목에 따라 양측이 입증 가능한 자료의 일부 소실, 법리적 상호 불일치, 사안의 정치적 요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선통치자들은 양국의 신정권 수립 이후 열리는 회담인 만큼 종래와는 다른 기대감을 나타내며 상호존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토론을 거듭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35]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말기에는 주춤했던 한국의 국내경제와 여론 동향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협회 기관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36] 장면 총리는 1961년 새해에 '중요시책 7개 항목'을 발표, 그중에서 장기개발계획의 추진방안을 설명하면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일본인의 투자 또는 차관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37] 한일회담 교섭은 착실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재계 관계자들의 방한이 출발 직전 한국의 국내 반발로 인해 돌연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통치자들은 한국의 여론을 살피며 대일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일본 재계의 경제시찰단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장면 정권의 무원칙적인 대일 융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38] 2월 한국 민의원에서는 '한일관계에 관한 결의안'이 발표됨으로써 대일외교에 대한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결의안은 평화선 수호와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에서 기인하는 "손해와 고통의 청산" 이후에, 그리고 경제협력도 국교수립 이후 국가통제하의 경제발전계획에 맞춰 국내산업이 "침식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39] 이 결의안을 두고 한일회담 교섭대표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났

35)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5호 1960.11.1, 1면.
36) 한국 언론사들의 일본 관련 기사, 한국은행 월보 중 국내경제 동향, 인구, 선거권자, 도시·농촌의 호적상 등록가구의 데이터를 소개했다.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0호 1960.6.1부터 제161호 1961.5.1까지를 참조 바람.
37) 『동아일보』 1961.1.5, 1면.
38)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8호 1961.2.1, 1면.
39) 대한민국 국회, 「제5대국회 제38회 제18차 국회본회의(1961.2.3) 민의원회의록」, 『국회회의록』,

고, 이러한 사실을 접한 조선통치자들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한국의 국민감정을 대변하고 있다며, 교섭 타결의 희망적 관측을 경계했다.[40]

이러한 가운데서도 제5차 한일회담은 분과위원회별 개최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조선통치자들은 이렇다 할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애당초 기대는 물론 금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한국의 4.19혁명 이후의 정권교체가 대일감정의 전환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국민감정의 본질적 변화로 직결시켜서 낙관하는 건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이처럼 미묘한 한국의 '국민감정'을 정확하게 살펴서 그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기본조건이라고 첨언했다.[41]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한일관계가 정체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국이 일제하에 놓인 한국을 분리・해방・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 국제법규에서도 이탈하진 않았는지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작금의 한일관계에 갈등의 씨앗을 제공한 미국이 한일회담 중재에 적극 나서서 "속죄(償い)"하라고 요구했다.[42]

흥미로운 점은 조선통치자들이 지적했던 제5차 한일회담의 진척 상황과 미국의 방임과는 달리, 실제 한일 양국관계에서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교섭이 미국의 관여와 맞물리며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사실이다. 실제로 장면 내각에서는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형식적인 논의와 함께 고위정치 레벨에서의 비공식적 절충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문서상 확인이 가능한 최초의 사례는 1961년 5월 김용식 외무차관과 이세키(伊関) 아시아국장 사이에 이루어진 회담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는 개인채무의 청구권 해결, 기타 일반청구권을 무상 경제원조로 할지, 정부와 민간 차관의 할당 규모는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오가며, 결국 총액은 정치적 절충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언급되었다. 이 시기 청구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타결 방

2-4면,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2021.7.17. 검색).
40)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59호 1961.3.1, 1면.
41)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60호 1961.4.1, 1면.
42)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61호 1961.5.1, 1면.

식과 총액 면에서 김종필・오히라(大平) 메모의 원형이 만들어짐에 따라 한미일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43] 이 같은 교섭 내막은 조선통치자들의 한일회담 인식이 얼마나 실상에서 벗어나 있었고, 교섭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4.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한일협정 체결: 뒤섞인 기대와 우려

앞서 등장했던 이세키 국장은 자민당 방한의원단의 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었다.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측 의원들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기시의 파벌을 중심으로 설치된 자민당 외교조사회 일한문제간담회(日韓問題懇談會)의 구성원들이었다. 그들은 귀국 후 5월 15일에 보고회를 열었고,[44] 그날 이세키 국장은 외무성 보고에 메모를 남김으로써 교섭 전망과 일본 측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 그리고 총액에 대한 시안(3억 달러 플러스알파)을 제시했다.[45]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한국에서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조선통치자들은 자랑 섞인 무용담을 늘어놓던 자민당 방한 의원들이 크게 놀랐을 것이라며 비아냥조로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식민통치하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가 일 년도 채 안 되어 두 번이나 일어난 사실, 그리고 헌법 정지에 더해 힘에 의한 정권 이동이 발생한 사태는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유감을 표명하고 하루 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했다.[46]

5.16쿠데타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던 조선통치자들은 일본에서 한국문제를 둘러싼 논조가 적극적 관여와 소극적 방임으로 갈리는 가운데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케다 총리가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한국 “국민의 생활 안정”을

43) 이세키 국장은 전전의 대동아성(大東亞省) 시절 부하였던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한통숙과 국방부장관 현석호와도 접촉해서 청구권 총액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 시기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한국문제TF’를 설치하고 현안 검토를 거친 결과, 공식적 관여 없이 한일회담의 ‘촉매’ 역할을 자임했다. 李鍾元, 「日韓会談の政治決着と米国: 「大平・金メモ」への道のり」, 李鍾元, 木宮正史, 浅野豊美編著,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Ⅰ 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84-91면.

44) 外務省公開外交記録文書, 「韓国訪問議員団帰国報告」, 文書番号518, 1-58면.

45) 李鍾元, 앞의 글, 88-89면.

46)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62호 1961.6.1, 1면.

지적한 발언에 대해 평가했다. 그들도 한국의 군사정권이 민주적이냐 독재냐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향후 "민생의 안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47] 그리고 그들은 38도선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접점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군사정권과 대한경제원조를 둘러싼 미일 협력은 대공산정책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산권을 대항해야 할 적(敵)으로 적극 명시하지 않았던 조선통치자들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그들은 제6차 한일회담 개최를 앞두고 반공을 축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그렇기에 더더욱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기대했다.[48]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제6차 한일회담도 지지부진한 기색을 보이자 조선통치자들은 또다시 '미국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다나카 회장이 1962년 새해 인사말에서 한일관계나 귀환자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어떤 의미에서 책임"이 있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서 전후처리를 최종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49] 이어서 하라다 다이로쿠(原田大六, 전 관방기획과장) 전무이사는 특히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과 책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점령군으로서 미국이 사전에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대일강화조약으로 그 조치에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청구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기에 미국은 이 문제의 제삼자가 아님을 각성하고 책임과 입장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진정한 자유주의국가들의 리더가 되라고 압박했다.[50]

그러나 미국은 장면 내각의 한일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인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케네디 정권의 '한국문제TF'에서 활약 후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버거(Samuel D. Berger)는 이세키 아시이국장과의 친분

47)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63호 1961.7.1, 1면.
48)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64호 1961.8.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66호 1961.10.1, 1면.
49)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69호 1962.1.1, 1면.
50)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70호 1962.2.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71호 1962.3.1, 1면. 협회 기관지에 '미국 책임론'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하라다는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한정책의 근본에는 "무계획, 무반성"이라고 할만한 요소가 다분히 많기에 그러한 미국의 사고와 기본방침이 한일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02호 1964.10.1, 1면.

을 통해 사전에 그의 청구권 시안(3억 달러 플러스알파)을 접하고 한국 군사정권에 타결을 종용했다. 그 일환으로 1961년 8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이 비공식 특사로 버거 대사와 함께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고사카 외상과의 회담에서 한국 측 고위 관계자가 구체적 액수(8억 달러)를 처음 거론했지만, 일본 측의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자 버거 대사는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주일미국대사를 동반해서 외무성을 압박했다. 한국 측은 재차 타협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중재로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도중 이케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에 임했다.[51] 이처럼 미국은 조선통치자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정치적 타결을 도모했었다. 이는 교섭과정에서 조선통치자들이 철저히 배제된 측면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중재력 행사를 사이에 두고 한일 당국은 청구권 금액을 검토해서 1962년 3월 최덕신・고사카 외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회담은 그 자리에 배석했던 이세키 국장이 청구권 문제에 관여했던 기간 중 "가장 불쾌"했다는 회고처럼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한미 양국의 정치적 타결 요구를 견제했던 이케다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를 거쳐 총재에 재임하자 미국의 영향력과 중재 행사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제2차 이케다 정권의 두 번째 내각 개조에서 오히라 외무장관의 취임은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를 크게 진전시켰다. 오히라는 이세키 국장의 수정된 안(4억 달러)을 받아들이고 라이샤워 대사에게도 조속한 교섭 타결의 방침을 전했다. 1963년 한일 당국은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된 정치회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미국을 매개로 서로의 복안(腹案)을 살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이후 김종필・오히라의 두 번에 걸친 정치회담을 통해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합의되었다.[52]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권 액수가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지자 조선통치자들은 한일협정 체결을 위한 최대의 고비를 넘겼다고 직감했다. 그들이

51) 李鍾元, 앞의 글, 90-96면.
52) 같은 글, 96-106면.

보기에 그다음 과제는 한일협정이 "양국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53] 따라서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는 조약체결에 대한 신중론과 반대론을 힘으로 억압한다면, 반드시 나중에 "응어리(シコリ)"가 남기 때문에 국민을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54]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1963년 말부터 정계를 시작으로 대학가로까지 "대일굴욕외교반대" 투쟁이 확산됨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되는 6.3사태가 발생했다.[55] 우여곡절 끝에 1965년 6월 한일 당국은 기본관계 조약을 비롯한 제 협정에 조인했다. 이를 타지에서 지켜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생을 마감하고, 한국에서는 국회 비준을 저지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보선 전 대통령이 "망국적인 한일협정"이라고 비판, 장면 전 총리는 국론의 통일을 보지 못한 채 강행되는 현실이 "침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56]

한편 일본국회에서의 논의와 비준 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자민당과 사회당의 대립 양상을 보고 조선통치자들은 불만과 비판을 쏟아냈다. 그들은 체결된 조약, 제 협정에 대해 불만족스러우면서도 조속한 국교정상화가 필요하기에 국회 비준을 희망했다. 다만 정부 여당, 야당이 국회 논의에서 상반된 입장만 드러낼 뿐 국민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설명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누구보다 한일회담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면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국민의 절반은 그 현안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한 실정인데 정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냉정한 판단력이 더 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대로 비준된다면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혼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삼가며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라고 제언했다.[57]

---

53)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79호 1962.11.1, 1면.
54)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82호 1963.2.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94호 1964.2.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97호 1964.5.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198호 1964.6.1, 1면 등 다수의 지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55) 『조선일보』 1965.6.22, 4면.
56) 『동아일보』 1965.6.24, 4-5면.
57)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12호 1965.8.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13호 1965.9.1, 1면.

또한 그들은 일본국회가 사회당의 반대, 심의 거부, 정부 여당의 시한부 비준 강행 처리, 시종일관 당리당략과 이념투쟁에 얽매여 공전(空轉)을 되풀이한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형태만 갖춘 듯한 조약의 실시"는 국교수립 이후의 한일관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금의 정치인들에겐 더이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금번에 다하지 못한 책임을 앞으로 다해주길 바란다고 체념하듯 호소했다.[58] 1965년 12월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 및 제 협정이 비준, 발효되자 다나카 회장은 중앙일한협회 기관지의 연두 소감으로 이제 드디어 한일 양국이 "우방(友邦)"으로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축하하면서도 협정 내용 전반에 걸쳐 조목조목 비평했다. 협회 회원들 또한 같은 취지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한일수교 "첫해의 새로운 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59]

그사이 다나카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이듬해 협회의 신년사를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 전 식산국장) 부회장이 대신했다.[60] 그리고 1967년 그동안 협회 기관지의 논조를 주도해온 하라다 전무이사는 "8월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일관계에서는 특히 서로의 '국민감정'을 헤아려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당부했다.[61]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퇴임 인사를 남기고 협회를 떠났다.[62]

5.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 조선통치자들의 패전 이후 한일회담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한일회담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평가와 전제에 수정을 가했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이승만 정권 후반기 제4차 한일회담 개최에 이

58)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15호 1965.11.1, 1면.
59)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17호 1966.1.1, 1-4면.
60)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21호 1966.5.1, 1면;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29호 1967.1.30, 1면.
61)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35호 1967.8.30, 1면.
62) 中央日韓協會, 『同和』 제238호 1967.11.30, 3면.

르기까지 기시 정부는 반공을 축으로 미일관계의 재조정을 통해 아시아외교의 정책적 출발점을 한일관계의 정상화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한일회담을 결렬시킨 주된 요인이었던 일본의 대한청구권 주장과 구보타망언이 철회됨으로써 회담 재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 철회 문제의 주요 관계자였던 조선통치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으며, 기시 내각의 대한정책 전반에 걸쳐 비판했다. 그들이 기시의 측근인 야쓰기 특사의 방한을 두고 맹렬히 비난했던 사례가 그러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승만의 반일정책이 종식을 고하고 이전부터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던 장면이 내각을 수립하자 조선통치자들은 한일회담 재개를 넘어 정식 협정 체결까지 기대했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일외교에 대한 대립이 표면화되고 제5차 한일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보이자 그들은 지지부진한 회담의 원인으로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일관계에 갈등의 씨앗을 제공한 미국이 한일회담을 중재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 한일회담에서는 청구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타결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오갈 정도로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실제로 김・오히라 메모의 원형과 한미일의 합의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사실상 한일회담은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자회담이었다는 표현처럼 5.16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미국의 관여 정도는 한층 더 강화되어 교섭은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63] 이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고 조선통치자들은 실제 교섭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채 '미국 책임론'을 또다시 꺼내 들며 비판했다. 청구권의 액수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한일회담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한일협정이 양국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의 전개 과정은 그들이 강조했던 것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럼에도 조선통치자들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축하하며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양국의 '국민감정'이 한일회담과

63) 李鍾元, 「韓日会談とアメリカ: 『不介入政策』の成立を中心に」, 『国際政治』 105号, 日本国際政治学会, 1994, 163면.

협정 체결과정에서 소외된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즉 그들이 상상했던 한일 국교정상화는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국민의 이해와 감정을 존중하여 그 어떤 응어리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들만의 상상력이 한일관계에서 일관되게 중요시했던 곳에 관통해 있었다. 이는 오늘날 한일관계에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국민감정을 헤아려 행동하라는 당위성과도 많이 닮아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통치자의 관점은 현재 한일 양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몸소 제국주의을 실천했던 인물들이 주장하기에는 내선융화(內鮮融和)의 미련이자 역설일 뿐이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外務省公開外交記録文書, 「小坂大臣・鄭外務部長官会談録」, 「小坂大臣訪韓の際の尹大統領,張国務総理との会談中注目すべき諸点(局長の口述されたもの)」, 文書番号512, 1-32면.
外務省公開外交記録文書, 「一九六〇年九月六日小坂大臣ソウル到着の際の声明」, 文書番号772, 5-6면.
外務省公開外交記録文書, 「韓国訪問議員団帰国報告」, 文書番号518, 1-58면.
中央日韓協會, 『同和』(友邦文庫 청구기호: A ト12).

金東祚, 『冷戰시대의 우리 外交』, 문화일보, 2000.
김용호・조영희, 『장면 정권의 내각제는 왜 실패했는가?』(연구보고서 09-03), 미래한국재단, 2010.
노기영,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125-160면.
박경민, 「일본인 귀환자 단체 同和協會, 中央日韓協會의 한반도 인식: 기관지 『同和』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2-1,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29-52면.
박정진, 「북일냉전, 1950~1973: 전후처리의 분단구조」, 『일본비평』 22, 서울대 일본연구소, 2020, 112-139면.
서중석 지음,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07.
오구마 에이지 지음, 조성은 옮김, 『민주와 애국: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공공성』, 돌베개, 2019.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공간, 2016.
이형식, 「조선통치관계자와 한일교섭」, 『일본연구』 80,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9, 53-77면.
장박진, 『미완의 청산: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 역사공간, 2014.
정병욱, 「조선총독부 관료의 일본 귀환 후 활동과 한일교섭: 1950, 60년대 동화협회(同和協會)·중앙일한협회(中央日韓協會)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4, 역사문제연구소, 2005, 77-104면.
菊池嘉晃, 『北朝鮮帰国事業の研究: 冷戦下の「移民的帰還」と日朝・日韓関係』, 明石書店, 2020.
金恩貞,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政治史』, 千倉書房, 2018.
内閣総理大臣官房管理室, 『在外財産問題の処理記録: 引揚者特別交付金の支給』, 1973.
朴敬珉, 『朝鮮引揚げと日韓国交正常化交渉への道』,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8.
矢次一夫, 『わが浪人外交を語る』, 東洋経済新報社, 1973.
原彬久編著, 『岸信介証言録』, 毎日新聞社, 2003.
李鍾元, 「韓日会談とアメリカ: 『不介入政策』の成立を中心に」, 『国際政治』 105号, 日本国際政治学会, 1994, 163-181면.
_____, 木宮正史, 浅野豊美編著,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 I 東アジア冷戦編』, 法政大学出版局, 2011.

대한민국 국회, 「제5대국회 제38회 제18차 국회본회의(1961.2.3) 민의원회의록」, 『국회회의록』, 2-4면,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2021.7.17. 검색).

【Abstract】

Imagined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s by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 The End of Rhee's Government, Chang's Cabinet, and Early Park's Government

Park, Kyung-Min*

This paper is aimed at restoring how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perceived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e foundation of today's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this, they find out what caused the Korea-Japan relationship not to be normalized properly and what was consistently important in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n addition, if we pay attention to the Korea-Japan relationship between Rhee Syng-man and the Kishi administration, we can also see whether they had a lasting influence on the Korea-Japan talks. As it is well known, they work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o investigate the colonial asset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provided a decisive basis for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against Korea and supporting even its absurd remarks.

In this sense, their influence was definitely working on the Korea-Japan talks. However, in order to resume the talks four and a half years after the 1953 collapse of negotiations, the Kishi administration accepted the withdrawal of the right to claim the Korean government demanded.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in the Korea-Japan talks decreased sharply, gradually excluded from diplomatic negotiations,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the perception of the Korea-Japan talks. This paper examines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evaluation and prospects for Korea-Japan relations shown by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in these processes. And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ir perception of the Korea-Japan talks by contrasting the criticism of the US, which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noted as a factor that hinders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with the

* Research Professor,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

progress of actual negotiations. In addition,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is perception, we will reveal what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constantly valued in Korea-Japan relations.

Keywords: Former Japanese Colonial Elites,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s, Claims, Criticism of the US, National Sentiment.

접수일: 2021.09.12. || 심사일: 2021.10.08. || 게재확정일: 2021.11.20.